

「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」 발족식 및 1차 포럼 결과보고

1. 개요

□ 행사 취지

- 기후위기 심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,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

* (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) 농어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다양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 운영

□ 제목 :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

□ 주최 : 국회의원 김성환, 국회의원 양이원영, 국회의원 위성곤, 국회의원 이소영, 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
□ 일시·장소 : '20. 7. 10(금), 10:00~12:30,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

□ 참석자 : 이유진 포럼 위원장 등 85명 참석

- (국회의원) 김성환 의원, 양이원영 의원, 위성곤 의원, 이소영 의원
- (농특위) 정현찬 위원장, 황수철 분과위원장,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
- (포럼 위원 및 고문) 이유진 위원장 등 20명
- (관계부처) 농식품부 조재호 차관보 등
- (기타) 기관 및 단체 관계자, 농어민단체, 전문가, 기자 등

□ 주요 내용

- (1부 발족식) 개회사·환영사·축사, 포럼 출범취지와 활동계획 보고 등
- (2부 1차 포럼) 농어촌 기후위기·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향
 - 발제 : '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' 등 3건 발제
 - 토론 : 좌장(황수철 분과위원장) 및 패널 4인 토론

2. 주요 내용 및 결과

① (발족식) 개회사·환영사·축사, 포럼 출범취지와 활동계획 보고

□ (개회사) 김성환 국회의원

- 재생에너지 원천인 농어촌 공간을 중심으로 지구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함

□ (환영사1) 정현찬 농특위원장

- 기후위기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곳이 농어촌지역임.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님, 전문가, 관계자 분들 앞으로 함께 하여주시기 바람

□ (환영사2) 위성곤 국회의원

- 화학비료·농약 저감, 지역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·임업·어업 부분의 구체적 방법 마련을 기대함

□ (환영사3) 양이원영 국회의원

- 농어민 소득으로 직결되고 지자체 세수로 연결되며 전 국토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, 스마트하고 디테일한 에너지전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함

□ (환영사4) 이소영 국회의원

- 농어촌은 기후변화를 가장 크게 체험하는 공간이자 대응 및 감축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임.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출범을 환영하고, 정책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아젠다로 다루어지도록 함께 하겠음

□ (축사)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(代) *김현수 농식품부 장관

- 농식품부는 염해간척지, 저수지 및 진흥구역 밖 농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기여 중. 본 포럼이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음

□ 포럼 출범취지와 활동계획 보고(이유진 포럼위원장)

- (목적) 기후위기에 대응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에너지 전환방향 모색
- (기본방향) 농어촌 분야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관련 정책 현황, 현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과제 도출
- (활동계획) 정책연구와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핵심내용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과제 최종 제안(2020.12월)

구분	발족식 및 1차(7월)	2차(8월)	3차(9월)	4차(11월)
주제	①데이터 기반구축	②한국판 뉴딜	③재생에너지	④추진체계 및 제도
방법	국회토론회	오픈포럼	워크숍	국회토론회

- ① 농어촌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안
- ② "EU 그린딜" 등의 영향 및 "한국판 뉴딜"의 농어촌분야 과제
- ③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(협업 거버넌스, 갈등해결, 지역경제 활성화) 및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(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감축, 가축분뇨 활용 등)
- ④ 기후에너지 관련 농어촌분야 추진체계(중앙·지자체, 거버넌스) 및 법·제도적 기반

② (발제) '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' 등 3건

- ①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 (남재작 소장)
- ②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 (안옥선 연구단장)
- ③ 농어촌에너지 통계 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(최문선 연구위원)

□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(남재작 소장)

- 농업에너지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 및 정책 수립 부진
 - 농업의 온실가스 발생량 통계의 주요항목은 장내발효, 가축분뇨, 토양 등 능동적인 감축이 쉽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됨
 - 농업에너지 관련 통계 및 대책은 시설원예 생산비 및 절감에 집중되어 있어, 부족한 통계가 부족한 대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
 - 축산업 발전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환경과 생산비 문제로 인식

-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농업 재정의 및 관련 대책 필요
 - 자원순환을 농정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, 바이오가스 발전과 자원 재순환 정책을 강화하여 집중할 필요
 - 농업분야 에너지 진단산업을 통해 정확한 사용현황을 평가하고, 자원순환 및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디지털 플랫폼 구축

□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(안옥선 연구단장)

- 농어촌 기후위기 관련 데이터 구축 및 활용상의 문제점
 - 농가/지역 단위 데이터 및 시계열 데이터 부족, 기 수집 데이터의 위치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부족
 - 데이터 표준화 미흡 및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현행화 어려움
 - 연구실 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자료의 연계·공유 노력 부족
- 효율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제언
 -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통계자료 확충,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, 데이터 구축시 위치정보 필수 수집 등 데이터 수집체계 개선
 - 데이터 표준설계지침 마련 및 통합수집 체계 구축, 통합관리를 위한 디지털화 기반 등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유기반 구축

□ 농어촌에너지 통계 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(최문선 연구위원)

- 농림어업 부문 <에너지총조사>의 한계점
 - 표본크기 부족으로 세부 그룹별 에너지 소비특성 파악(분석) 불가
 - 조사내용 부족 및 정확성 미흡으로 정책평가 및 효과분석에 제한적
 - 예산 부족으로 농림어업 부문의 표본크기 및 조사내용 확대 어려움
-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을 위한 <에너지총조사> 개선방안
 -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 기초자료 확보 위한 신규조사 설계
 - 데이터 공유 및 공개범위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 추진
 - 농어촌에너지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허브기관 지정 및 운영

3 (토론) 주요 내용

[좌장] 황수철 분과위원장

[패널] 김종안 회장(RANET) 이근행 위원(기후위기비상행동)

김지현 팀장(농식품부) 이준수 박사(국립수산과학원)

□ (패널) 이근행 위원(기후위기비상행동)

- 농업·농촌 데이터의 적절한 수집·관리·활용이 미비한 이유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족 및 사회의 관심과 감시·견제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
- 포럼이 데이터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의식이 약해져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
- 에너지 전환의 방향은 농어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무엇보다 농지보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함

□ (패널) 이준수 박사(국립수산과학원)

- 어업분야 에너지 사용은 화석연료가 90%이상으로, 어선 현대화와 스마트 양식 개발·도입 등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전환 필요
- 어업분야 통계자료는 농림어업 통계에 포함되어 어업분야 만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데이터 기반 대응체계 확대 필요

※ 참고 :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 해양환경의 변화분석과 우리 바다에 맞는 기후모델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“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연구” 등 추진 중

□ (패널) 김종안 회장(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)

-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데이터가 부족함. 특히, 지방 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우선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·수집·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시급
- 생산-유통-가공-소비-폐기에 이르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데이터 구축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. EU는 “Farm to Fork” 관점에서 그린딜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데, EU의 데이터 수집 참고할 필요
- 데이터는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분야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전체를 코디네이팅 가능한 제도 도입 필요

□ (패널) 김지현 팀장(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)
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 소개

- ▶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
- ▶ 제2차 농림축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(2021~2030년)
- ▶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·취약성 평가
- ▶ 농식품 기업과 농업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원
- ▶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촌 태양광 통계구축 시범사업 추진

-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지휘본부 부재, R&D와 정책 연계 미흡, 기후변화 긍정적 요인 능동적 활용 미흡, 걸음마 단계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등 농식품 분야 다양한 해결과제 존재
-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관련 사업 확대, 이상기상 관련 정보 전달체계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·고도화 필요

□ 고문 의견

- (홍중호 고문) 포럼이 실질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포럼의 논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
- (홍성열 군수)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 우량농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. 농촌공간을 체계적 관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 필요
- (주형로 고문) 기후위기 대응은 다양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고, 에너지전환의 중심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, 관련 통계강화 필요

□ (좌장) 황수철 분과위원장(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회)

-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 에너지 전환은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문제임.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음

3. 향후 주요 계획

□ 포럼과 연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(7월~12월)

※ 연구과제명 :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

□ 제2차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개최(8월중)

<행사 주요사진>



국민의례



환영사(정현찬 농특위원장)



활동계획 보고(이유진 포럼위원장)



단체사진



발제



토론